

# 목 차

---

## ■ 공공 부문 혁신과 감사 정책의 방향

Executive Summary .....	1
1. 밀레니엄의 유래 .....	2
2. 21세기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 .....	6
3.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나라의 행정 풍토 .....	7
4. 관료들의 용기와 소신이 필요할 때 .....	10
< 토론 > .....	11
■ HRI 경제 지표 .....	28

## 공공 부문 혁신과 감사 정책의 방향

### 1. 밀레니엄의 유래

- ‘밀레니엄 (Millennium)’이라는 말은 1,000을 의미하는 라틴어 ‘밀레 (Mille)’와 年을 의미하는 ‘에니엄 (Ennium)’의 합성어임
- 21세기는 2001년부터 시작되는 것이 옳으나, 독일 빌헬름 2세의 칙령으로 20세기가 1900년부터 시작된 유례를 따라 200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봄
- 많은 사람들이 20세기가 시작될 당시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했었으나 1차 세계 대전, 불세비키 혁명, 2차 세계 대전 등 고난의 역사와 세월을 보냄

### 2. 21세기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

- 21세기에 세계는 인류 역사상 세 번째 혁명인 정보화 혁명을 경험하였고, 이후 급속한 변화의 물결이 지배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싱가포르 : 굴뚝 산업에서 지식기반산업 (知識基盤産業, Knowledge Based Industry) 위주로 경제 구조를 변화시킴
- 남미 : 많은 국가에서 좌파 대통령들이 집권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 원리를 중심으로 남미 경제 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인도 : 전통적인 폐쇄 경제 시스템을 포기하고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로 부상함

### 3.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나라의 행정 풍토

- 한국은 개발 연대 40년의 압축 성장에 대한 꿈과 낙후된 사고, 제도, 관행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마인드가 결여되어, 과거 독재 정권 시대에서의 획일주의 사고가 잔존함

### 4. 관료들의 용기와 소신이 필요할 때

- 경제 부처의 장관과 직원들이 보다 중장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며, 소신을 가지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의 미학’이 절실함

# 공공 부문 혁신과 감사 정책의 방향

- 출처 : 한경미래니엄포럼
- 일시 : 2006년 1월 26일
- 연사 : 전윤철 감사원장
- 주최 : 한국경제신문,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 주제 발표

### 1. 밀레니엄의 유래

전윤철 감사원장 : 오늘 경술년 첫 해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한국경제 신문사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과 이 밀레니엄 포럼의 회원이신 여러분야에 걸쳐서 유명하시 분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경제와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곧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립니다만 6년 전에 탄생한 '한경 밀레니엄 포럼'이 먼 훗날 빠를수록 좋겠지만 다보스 포럼과 같은 목적인, 무게가 있는 포럼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하고, 또 다보스 포럼 정도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후원과 격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한경 밀레니엄 포럼을 이끌어 가는 분들은 그런 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니까 제가 경제 부처 장관 시절에 두 세 번 나와서 이런 대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다시 경제부처의 직원으로써 여기에 와서 보니까 그 당시 직접 간접으로 많은 관계를 맺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공직 사회의 선배도 있고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도 있고, 언젠가 한번 어느 광고주대특강에서 학사 위에 석사 있고 석사 위에 박사 있고 박사 위에 육사 위에 육사 위에 여사 있고 여사 위

에 신문사 있다는 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신문사 위에 바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광고주가 옛날에 기자들, 옆에 과거에 만남을 얘기 했습니다만 사실 기획원 실무자 시절 우리 주필님이나 신사장님이 기획원 출입할 때만 해도 한 마디 하면 짝 소리 못하고 대단히 기자가 높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막상 신문사에서 개최한 광고주 회사 조찬 특강에 나가니까 회사가 신문사보다 훨씬 높은 것이 아니냐는 점을 느꼈습니다만 그 당시 친하게 지냈던 기자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노변정담(爐邊情談) 비슷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감사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밀레니엄 포럼이라는 명칭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Millennium)'이라는 말은 1,000을 의미하는 라틴어 '밀레 (Mille)'와 年을 의미하는 '에니엄 (Ennium)' 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세기, 2세기 할 때는 100년을 단위로 하지만 밀레니엄이라는 말은 밀레의 1,000과 에니엄이라고 하는 년(year)이 합쳐져서 1,000년을 의미합니다. 왜 이 밀레니엄이 중요성을 갖느냐 하면 항상 세기가 바뀌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이 되면 세계 각국은 누가 이 새로운 천년을 이끌어 가고 새로운 1세기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십진법으로는 1부터 10, 그리고 11부터 20, 1부터 100 이렇게 나가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밀레니엄 포럼이 2000년에 생겼던 것과 같이, 2000년에 세계 각국은 그 당시 미래 학자들이 새로운 천년, 새 천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누가 국제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21세기의 새로운 천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화와 정보와 혁명이 합쳐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진입했다고 해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십진법에 의하면 사실은 새로운 천년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는 안 되고 2001년부터 시작해야 맞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학과와 역사학과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일단 21세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지만 앞으로 2,000년대가 끝나면 그때는 우리 모두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겠지만, 아마 새로운 천년이 3000년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3,001년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왜 그러면 십진법에 의하면 2001년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2000년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이것은 유럽의 역사적 감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로고스적 이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나토(NATO) 사령관을 할 때 드골이 부사령관이었습니다. 드골은 그 밑에서 매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키 크고 잘 생긴 드골이 아이크 밑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급기야 프랑스가 '프랑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됩니다. 지금도 프랑스와 미국 사이에는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8세기, 19세기 이때에 유럽은 물론 문명사적으로 그 당시 미국은 별 볼일 없는 국가였습니다.

그 때까지 유럽이 세계사를 주도했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3세기부터 출발한 합스부르크 왕조가 19세기 중반까지, 정확하게 1918년에서야 붕괴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 합스부르크 왕가의 큰 줄기는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독일, 오스트리아, 이쪽이 대종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럽을 이끌어 나간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럽의 중심 세력이라고 자부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후예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섬놈들이 웃기네 그런 식으로 영국의 힘을 상당히 시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게르만 민족이 매우 머리가 우수한 민족입니다. 비스마르크 총리를 아실 텐데 그 당시 독일의 황제가 빌헬름 2세입니다. 이 황제는 1888년에 등극해서 1914년부터 시작되어 1918년 종전이 된 1차 세계 대전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 빌헬름 2세는 영국에 저렇게 해양 세력으로써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왜 게르만 민족은 그것을 못하느냐 이것이 한이었어요. 이 황제가 비스마르크 총리를 해임하는데 그 해임 사유는 황제는 물리적인 영토 확장을 원했는데 비스마르크가 내치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빌헬름 2세는 아프리카 등 해양을 중심으로 영국의 세력 확장을 본받기를 원했는데, 소위 물리력에 의한 영토 확장 그 정책이 어떻게 보면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2차 세계 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확장 정책을 썼지만 비스마르크는 내치를 주장했습니다. 거기에서 비스마르크와

의견 충돌로 총리를 해임하고 확장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차 세계 대전의 패망과 함께 퇴진되어 독일의 마지막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1888년에 즉위했으니 19세기를 살아오면서 20세기를 맞았어요 이때 칙령으로 20세기는 1900년부터 시작한다. 1901년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야 맞는 건데 1900년부터 시작한다는 칙령을 발표 했어요 이것이 효시가 되어서 20세기가 1901년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1900년부터 시작이 됐다 사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소위 게르만 민족의 국제 사회에서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또 게르만 민족이 국제 사회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빨리 발표해야 되겠다. 그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뉴욕은 쾌청한 날씨였고 구라파 하늘에는 엄청난 먹구름이 끼었다고 합니다. 1905년 빅토르 위고는 인류를 행복할 것이라고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계몽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고 계몽주의는 부와 편익을 인류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빅토르 위고는 세계 인류를 행복할 것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고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소비에트에서 일어났고 1940년대에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여러 가지 고난의 역사와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사의 부침, 그리고 걸쭉한 영웅들의 부침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21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환경 밀레니엄 포럼이 앞으로 더 잘되고자 한다면 새 세기, 새 천년에 걸 맞는 미래 학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포럼의 회원 가운데 송대회 박사가 나와 있습니다. 금융연구원 원장하실 때 송박사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박사 4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연구원을 만들어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가야 할 시스템, 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걸쭉한 미래 학자가 있으면 봉급을 많이 줘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미래 학자를 영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에도 그러한 단기 과제보다는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미래 학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앞으로 1세기 더 나아가 천년에 해당하는 과제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2. 21세기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

그래서 21세기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1세기까지 인류를 세 번의 대혁명을 겪습니다. 유목 생활에서부터 시작된 인류가 BC 7000년경에 농업 혁명을 계기로 해서 정착 생활에 들어가고 진부하고 느리고 순진했던 농경문화가 AD 17~18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그 산업 혁명 약 200년 후에 세계화와 함께 정보화 혁명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문명사적인 전환 과정을 겪었는데, 특히 최근에 들어 매우 빠른 속도로 국제 사회가 변화하고 여러 가지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을 보면 싱가포르 그 동안에 굴뚝산업 중심으로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하다가, 홍콩, 상하이, 중국, 인도가 부상하여 도저히 굴뚝 산업에 의한 물류와 금융 체계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수정한 것이 소위 지식기반산업(知識基盤産業, Knowledge Based Industry)입니다. 도시 싱가포르를 지식 관련 산업의 단지로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병원이 7개나 증시에 상장을 시키고, 세계 유명 대학이 들어와서 교육의 허브 역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 남미가 완전히 좌파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 구조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된 칠레의 ‘바첼렛’ 여자 대통령도 그렇고, 우루과이의 ‘타바레 바스케스’ 대통령, 베네수엘라의 의사 출신이지만 좌파인 ‘우고 차베스’ 대통령 등 온통 좌파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남미 대통령들이 좌파 중심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새로운 종속이론이나 해방신학과 같은 쪽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서 남미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과거의 종속이론과 해방신학은 없어지고 지금은 완전히 시장 경제 바탕을 둔 실용주의적 좌파 정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인 ‘룰라’가 노동조합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막상 노조 앞에 나가서는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 됐을 때 당신들에게 공약한 사항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란 세레까지 맞았습니다. 차베스 대통령도 막강한 석유 자원을 계기로 해서 미국에 대해 맞서고 있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걸 개방 시스템에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남미에 가서 안데스산맥을 뚫어주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영토가 남미 전체의 3분의 2, 인구도 합치면 70~80%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태평양에 진입하려면 파나마 운하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 후진타오가 안데스산맥을 뚫겠다고 하는 것은 룰라 대통령이 지금 꿈꾸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안데스 공동체(ANCOM)를 합쳐서 대남미 시장권을 형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구가 1,800만 명인 상파울로에 우리 청계천 같은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상파울로 실개천에 약 7조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 대역사를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남미가 좌파 대통령이 들어서기는 한데 옛날과 같은 그런 좌파, 그런 오타키 경제(Autarky Economy, 폐쇄경제, 자급자족경제)도 아닙니다. 옛날에 시카고학파가 칠레의 경제 정책을 주도해서 칠레가 비교적 시장 경제에 충실한 정책을 써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오타키식 자급자족 형태, 이게 종속이론 아닙니까? 미국 자본 들여오지 말자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의 좌파 정권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파키스탄이 경제사 쪽으로 보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오타키 경제를 추구해 왔습니다. 해외와는 담을 쌓고, 그러한 인도가 브릭스(BRICs)라고 하는 그룹중 중국과 더불어 다시 새로운 그룹인 친디아(Chindia)를 형성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미래 학자들은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 3.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나라의 행정 풍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 100년의 변화 속도, 그 변화 속도는 현재는 10년 아니면 1년의 변화 속도에 맞먹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계가 이렇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지난 개발 연대 40년의 압축 성장에 대한 꿈과 사고와 제도와 관행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장으로 와서 시스템 감사를 얘기한 것도 지난 40여 년 동안 경제 부처 실무에서부터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1960년대 개발연대부터 21세기 초까지 기간 동안에 IMF 사태를 맞아서 구조 조정을 하고 금융기관을 팔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많

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사원에 가서 보니까 고쳐야 할 관행이나 제도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감사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소기업체의 단체 수의 계약 제도를 없앴습니다. 또한 건설업계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집 한 채 지으려면 환경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평가해서 3년 7개월에서 4년에 가까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각 평가 위원회마다 위원이 2, 30명인데 그 위원들한테 가서 설명해야 되고 로비해야 되고 각각 평가받아야 되는 등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다 일원화 시켜 버렸습니다. KTX가 다남에 따라 항공 수요가 크게 줄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제 고향을 포함해서 김제 공항, 영일만 옆에 울진 공항 등 지방 공항들이 계속 건설 중입니다. 민항 수송 수요가 KTX 오픈을 계기로 해 가지고 4, 50% 밖에 가지 않는데 건설부에서는 계속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건설부장관이 나는 국회의원이 무서워서 발표 못 하겠다 해서 제가 대신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 7, 8명이 내 사무실에 와서 드러눕습니다. 그러던 말던 공항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한 것입니다만 이태리 밀라노와 같은 패션 산업을 일으키겠다고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 패션 산업이면 넥타이 하나만 놓고 봐도 칼라에 자신이 없으면 못 합니다. 그런데 밀라노는 중소기업들의 과다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 칼라를 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6,300억 짜리가 막 나갑니다. 기획예산처 장관한테 얘기해서 돈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부산의 신발 산업의 예를 들면, 신발 산업이란 것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데, 거기다가 예산을 막 쏟아 붓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고향이어도 안 된다 해서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신발,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예산 한 푼 안 나갔습니다.

소위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통상적인 레드 오션 시장 (Red Ocean, 무한 경쟁) 을 찾을 게 아니라, 블루 오션 시장 (Blue Ocean, 신시장) 을 찾아 가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람들이 민간 기업이 진출한 분야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과 경쟁해서 도지사, 시장, 군수가 이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카지노가 있는 강원랜드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벌려놓은 사업 모두가 적자입니다. 거기다가 퇴출해야 할 사람들 데려다 산하기관 사장으로 앉혀 놓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1995년에 지자체가 탄생함으로써 지방화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WTO 체제가 발족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John Nyst)의 얘기처럼 세계화의 역설로 종족주의(Tribalism)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나이스비트는 UN 회원국이 현재 190여 개국인데 이것이 2030년대에 가면 600개 4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화에 의해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인류가 오히려 종족을 찾는 귀소 본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위 글로벌 패러독스의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역설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1995년에 탄생했고 세계화를 상징하는 WTO가 발족했고 그리고 우리 국민 소득이 10,000 달러에 도달 했던 시기가 1995년입니다. 그런데 이후 지방 자치 단체의 운영 상황을 보면 자치단체장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획일주의 사회, 독재 정권 시절의 이벤트성 행사에 몰두해 있어 가지고 그런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앞날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정보화 혁명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지자체도 일대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부에 서비스 산업국을 만들자고 대통령께 건의 드렸습니다. 서비스 산업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자 했더니 서비스 장관해라 그랬는데 이 장관들이 전부 다 자기 부처 기관 이기주의 때문에 진척이 되질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의료 교육에 대기업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의료와 교육이 발전하겠습니까? 명실상부한 교육과 의료 부문의 허브 역할을 하려면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13억 6,000명에 해당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을 겨냥하여 가까운 곳에 병원을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중국의 일인당 국민 소득 수준이 1,900달러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몇 만달러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면 레저와 의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까운 곳에 대기업 자금을 들여와서 일류 병원을 만들어 의료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장관이 대기업 자금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극구 반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세계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기 영역을 감싸 안고 보수주의적 입장을 보이는 행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순열주의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변화무

쌍한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까? 경제 특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재경부 장관이나 재경부 직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총리를 할 때 '경제 자유 특구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제 자유 특구법은 한국이 물류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 입니다. 그 당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이었습니다. 환적 물동량이 광양, 부산을 중심으로 연간 40%씩 늘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환적 해 주는데 부가가치 100%인 260달러나 되었습니다. 지금 양산항이 생겼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어 수입 제한 정책인 쿼터 시스템을 없앴습니다. 이전에 중국이 쿼터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에는 주변 국가의 항구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쿼터 시스템이 없어지다 보니까 모든 중국항이 직항노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개발하라고 했더니 지자체 장들이 개발이 안 되는 것을 특구로 지정해서 손 벌리고 앉아 있습니다.

#### 4. 관료들의 용기와 소신이 필요할 때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한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밀레니엄 포럼에서 가끔은 한국 경제를 비판도 하시고 저명한 학자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니까 글로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정 정권의 경제 정책이나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경제 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장관에서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구정물 통에 손을 담글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직을 상속받은 것도 아니기에, 소신을 가지고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통령한테 맡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처 장관들이 또는 해당 부처 간부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소신을 가지고 대응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도 옆에서 독려하고 비판하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입니다. 어떤 사회든 간에 갈등은 존재합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생동감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엔드 플러스 (&+, and plus) 라는 표현을 했는데, 즉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갈등을 해결하느냐 하는 데 '행정의 미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토론

정갑영 연세대 교수 : 오랜만에 원장님 뵈었는데 유명한 아호에 걸맞게 시원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토론자로 선정된 이유는 감사원장님이시라 피감사 기관에서는 토론하기 어려워서 저는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학도 감사를 한다고 해서 저도 오늘 말씀을 많이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마 원장님께서 앞에 해박한 역사관을 얘기하시다 보니까 서론을 많이 얘기하시고 본론은 많은 얘기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본론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저는 감사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평범한 사학에 있는 교수의 한 사람으로써 최근의 감사원에 대한 느낌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잘 하고 있는 일 두 번째는 걱정되는 일, 세 번째 그래도 아직도 기대되는 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 일은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시 최근의 감사원이 시스템 정책 감사로 바뀐 건 모두가 칭찬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원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 회계 부정에 관련된 몇 사람 구속하고 끝이 났는데 최근에는 감사원에서 발표하면 어느 기관이든 근본적인 정책에 대한 시스템 감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더 바람직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려되는 일은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감사의 정책 방향에도 나와 있고 대통령이 엇그제 말씀하신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의 화두가 양극화의 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양극화의 해소가 어떻게 정부 부처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가를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으로 나와 있던데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게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양극화는 지금 크게 일어난 현상인데 이 현상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논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보면, 청와대가 사회에 발표한 것을 보면 토론을 유도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는 하는데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 글을 두 번이나 읽어봤는데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극화의 원인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흔히 말하면 플로어 인컴의 임금 소득과 자산으로 비롯되면 스태크 인컴이 있는데 지금 참여정부 들어온 이후에 경제 침체로 임금 소득자에 의한 플로어 인컴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랄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스태크 인컴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를 해소하고 분배정책 위주로 나간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여러 집회에서 양극화가 더 극대화 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원인을 해결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역시 우리가 요즘에는 원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 하셨지만 경쟁의 원천이 결국은 기업의 경쟁 여건인데 어떤 상품을 수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기업을 유치하고 얼마나 투자 활동을 활성화시키느냐가 중요한데 그 동안 경쟁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투자 여건이 그렇게 악화 되어왔던 것이고 이것에 대한 성장의 기반 훼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연결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을 흔히 교육에서 말하는 양극화 해소를 하향평준화 쪽으로 몰고 간다면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걷어도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기본 반향의 시스템 정책 감사에 맞춰서 이 양극화의 해소도 어느 부처에서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부터 양극화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점검해 보고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댐이 지금 위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밑에서 세금으로 막는다고 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사학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겠다고 언론에 보면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너무나 민간 부문 깊숙이 감사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특히 대학에 관련해서는 어 총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지금 대학에 자율성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문자상으로는 있습니다. 항상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다붙어 있고, 또 대학 재정이 어려운데 최근에는 BK이나 이런 걸로 정부가 엄청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에 조건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재정적으로 더 정부에 의존적인 형태로 계속 나가고 있고 또 대학에 여러 가지 정책도 정부에 의존적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 정부

의 교육 정책이 너무나 일관성이 없습니다. 며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큰 정책들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하고 일관성이 없는데 이런 가운데에 사학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 더 자율성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감사원이 정책 감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21세기 밀레니엄 시대에 대학이랄지 전체적인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나가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감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감사원이 제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가야지 교육 문제도 지금 대한민국 온 국민이 교육 전문가인데 따라서 한 건만 나오면 매우 이론이 많고 갈등이 많은 분야인데 이런 분야에서 역시 감사원이 최종의 해결사로서 감사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직도 기대할 만한 다행스러운 일은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 원장님의 지론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책 방향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하고 있다. 시장 경제에 베이스를 두고 있다. 이걸 최근에 아마 제 생각에는 정부의 고위 정책 당국자의 입으로는 항상 얘기하지만 실제 실천으로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적거나 최소한 과거보다 훨씬 줄어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반 경제계나 학계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이 분야에서도 마지막으로라도 감사원에서 큰 방향을 밑바탕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자료를 보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직도 기대할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전윤철 감사원장 :** 양극화 문제가 역시 소위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 주창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 분배 얘기도 하고, 사실은 분배 얘기를 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견해를 가진 분배정책을 중시해야 된다는 식으로 의견이 피력된 적이 있지만 대통령과 대화를 해 보면 실질 내용은 그것도 아니다. 이걸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싱가포르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렇게 싱가포르가 서비스 산업 쪽으로 급진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경

우에도 느낍니다. 통계청에서 검색한 일자리 실업률이라든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보게 되면 제조업 경우에는 줄어 들고 있습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 들고 있고 서비스 업종에서 그나마도 늘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경제 계획은 실무자 시절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때를 보면 연간 10% 성장하면 약 32만이라는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때 통상 10% 성장하면 전주시 인구만큼 늘어난다고 했는데 요즘 제조업은 탄성치가 마이너스입니다. 제조업 쪽은 고용 탄성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통령 지시도 떨어졌습니다. 서비스업에 관련된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각 부처에 산발적으로 놔두어서는 산업으로 육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서비스 산업을 부흥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청와대 정책실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한편 이것은 행정의 여러 가지 미스들인데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양극화의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복지 부분에 일레가 많습디다만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정부가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에 대해서 최근에 경제 신문이라든지 일반 언론에서 투자가 왜 일어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투자가 아무리 투자에 대한 규제가 많아도 돈 벌 구멍이 보이면 목을 내놓고 투자를 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IT와 접목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IT화해도 기존의 생산 능력 가지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미래 학자가 노조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한 것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노조가 생산성을 넘는 그런 임금 요구를 할 경우 기업은 계속해서 인력을 성역화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곳에서 노사 간에 어떤 식으로 대타협을 하고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를 부양할 것이냐 이런 타협의 논리도 앞으로 적용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는 시장 경제의 원칙을 버려서도 안 되고 이것은 굳건하게 지켜 나가면서 나눔의 경제 정신을 어떻게 뿌리박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세 문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증세라고는 하지 않고 재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미국 경우에는 현재의 지출 구조, 현재의 세액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갈 경우 2020~30년 가면 미국 재정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미국 감사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 재정이 어떤 문제에 당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원을 통해서 검색하려고 했는데 기획 예산처 스스로가 현재의 상태로 가게 되면 상당히 미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아마 공론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구조를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 부산의 신발 산업 육성 등 여러 가지 불필요한 데, 대형 국책 사업,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해 놓았더니 감사원장으로 가서 보니까 수송 수요가 없는 도로를 건설회사가 자꾸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지원센터인 PICO를 폐지했습니다. 그 대신 KDI원장님은 여기에 안 나오셨는데, KDI에서 그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PICO가 있던 때에는 예를 들어 누군가 경부선이 쪽 나가는데 그 옆에 도로 놓으면 좋겠다고 부추겨서 민자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상한 수송 수요가 미달되게 되어 통행료가 덜 들어오면,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상해 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장관한테 며칠 전에 얘기했습니다. 진짜 한번 스크린 해 보라 앞으로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평가를 할 것이다. 민자 사업, 밀라노 프로젝트 그런 것들 모두 감사원이 기획예산처에 통보해서 예산을 못 주게 한 것입니다. '감사원도 할 테니까 스스로 좀 해라' 해서 앞으로 우리 평가원이 활성화 되면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메타 평가를 감사원이 해서 그 사업이 진짜 가야 하는지 안 가야 하는지,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학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헌법에서 보장한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사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대학의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유를 감사원 직원이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법과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의 본질을 이해합니다만 감사원 직원들이 학문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전체가 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곳까지는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사학 재단의 재정 운영 비중이 1, 2%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중학교는 87%가 정부 재정이고 고등학교는 59%가 정부 재정입니다. 거기다가 연구비는 포함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87%, 59% 정부가 그 경상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사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사학에 출현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팔아서 착복하는 것은 안 됩니까 것입니다. 지금 감사원이 보고자 하는 것은 87%, 59%에 주는 정부 재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누가 횡령하지는 않는지, 또 말은 기본재산 출현이라고 해 놓고 그걸 팔아서 사학 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보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유를 감사원이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동감사 얘기가 처음에 있었는데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원이 헌법에 보장된 그런 원칙에 따라서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 활동은 대학에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자 시절부터 예산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70년대 중반부터 대학과 각종 연구소에 특정 연구개발비를 처음에 시작이 750억 원입니다. 70년대 중반에 특정 연구 개발비가. 그 당시에 750억 원이면 매우 큰돈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연구 개발 단지 만들고, 대학의 기초 연구소도 제가 국장할 때 50억 원을 별도로 따와 가지고 소위 대학의 기초 연구를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때 서울대 생물학과 학과장한테 들어오라고 해서 50억 원을 줬더니 이 교수가 능력이 없어서 결국 과학기술부에 뺏기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래 가지고 우리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연구비 투자가 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고 있는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는데 같은 아이템을 놓고 쪼개주고 있습니다. 또 평가 측면에서 외국에서 평가한 것과 우리나라가 평가한 걸 비교해 보면 어느 연구소를 통해서 결론만 봤지만 대체로 적정함, 다소 미흡함 이런 식의 평가 결과입니다. 이게 무슨 평가입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연구비 받아 가지고 다른 데 썼다면 그 교수는 절대 그 연구팀에 끼워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세금인데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한 교수는 그 연구팀에 끼워 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의 포커스는 연구비를 적정하게 어떻게 연구를 했고, 황우석 교수도 이번 에 합시다만 황우석 교수 문제는 줄기세포 바꿔치기 이것은 도난과 업무 방해, 검

찰은 소위 그런 형사상의 문제를 맞출 것입니다. 감사원은 그 연구비를 적정하게 쓰느냐, 연구비를 쓰고 난 후의 성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했느냐에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지 못 하는 교수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볼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지 대학의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 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격려성 말씀을 해 주신 시장 경제의 길 이것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고 또 세계가 아무리 분배를 강조하는 나라, 또 좌파 정부 이들도 실용주의 입장의 노선을 굳건하게 가고 있습니다. 오타키 경제 체제를 추구했던 인도, 종속 이론이 지배됐던 남미, 전부 다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경제 원리를 배제하는 경제 정책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 : 원장님 오랜만에 좋은 말씀 들어서 반갑습니다. 전에는 개별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특히 말씀 중에 "장기 비전이 필요하다" 그 말씀 너무나 감명이 깊고 또 IT화를 하고 기술 혁신에 따라서 제조업에서 고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역점을 뒀야 한다. 정말로 아주 시기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고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기획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지금은 재정 경제부지만 장기적인 비전과 기획을 어디에서 하는 건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산하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학자들이 주로 하고 각 부처에서 아마 똑똑하고 열심히 뛰는 사람은 파견 안 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 하는지 정보를 알려주는 정도쯤, 그러면 거기에서 보고서 나오는 걸 실무 부처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기획원에 오래 계셨고 장기 비전을 말씀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아닌 부탁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 자유 구역 이런 걸 만들자고 15년 전부터 늘 정부에 건의했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특

별 보고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경제 자유 구역을 잘 발전시켜서 이 나라 전체를 그렇게 만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개혁은 단계적으로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인천을 중심으로 경제 자유 구역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도 미국에 가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교육 기관 분교를, 또 미국의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탑 나치가 샌디에이고에 있는데 그 연구소 일부를 우리 한국에 유치하느냐 이것 때문에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제가 재정경제부에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장관도 개별적으로 만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첨단 원천 기술을 해야 되겠다 IT, BT, 특히 BT 해야 되겠다 또 지식기반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 의료 금융 관광 그 다음에 문화 산업을 중심으로 한 창조 산업, 특히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건 유수의 교육기관이나 R&D 센터 분교나 분원을 한국에 유치하는 게 제일 빠르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자유구역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니까 정부에서는 분위기가 어떠한가 하면,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다 좋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까지 외국 교육기관이나 R&D 기관을 유치할 형편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이 부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장님께서 이왕 장기 비전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좀 방향을 틀어 주시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일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사실 놀아도 됩니다. 나이도 많고 학교 정년퇴임한 지 2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이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주위 사람들 다 아는데, 그리고 방법도 학자로서는 정부 공무원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버리기가 아까워 가지고 고전분투하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전윤철 감사원장** : 조금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먹고살아야 할 게 뭐냐!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IT, BT CT 그런 성장 동력 리서치 부분과 경제 특구를 활용하는 건데 제가 경제 특구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께 세 번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역 지방 자치 단체의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앙 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리자, 두 번째는 경제 특구의 메리트

라고 하면 경영 여건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세계의 특구와 맞먹게 하거나 더 좋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특구를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땅을 팔아 가지고 뭔가 시설을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 비싸게 외국인이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혼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전라북도에 있는 새만금이 1억 6,000만 평입니다. 그걸 헬기를 타고 두세 번 돌아봤는데 저걸 특구화 했으면 좋겠다고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먼 훗날의 얘기이고 하여튼 특구에 대해서는 우선 송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에 외국의 학교나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엔트리에 여러 가지 벨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비영리 법인 아니면 학교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 법인한테 터져야 합니다. 의료도 국내 환자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외국 의료 법인이 들어오면, 이걸 전부 막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그 규제를 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나이 드셔서 쉬어야 할 때라고 하셨는데 지금 세대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 번 이상 얘기를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 :** 저는 우선 양극화가 올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화에 대해서 저도 전 교수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극화에서는 돈 잘 버는 사람이 설치하는 사회가 되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돈 못 벌고 돈 잘 쓰는 사람이 설치하는 사회가 되면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도 저희들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열심히 준비하는 애들은 취직하는데 게으른 애들은 취직 못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경쟁력 있는 젊은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한류를 보게 되면 늙은 사람보다는 젊은이들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을 서비스 산업 쪽에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것이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그 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조정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회 통합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해 집단 간의 사회 갈등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해결에 급급하면서 너무 과비용적으로 정책 조정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신문이나 그런 걸 보면 어느 스님께서 한번 드러누워 버리면 하루에 공기가 몇 백 억이 들어간다는 걸 보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걸 월급하고 비교해 보면 끔찍한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결이 되기는 했지만 너무 비싸게 해결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틀만 미리 해결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무리한 방법이 있겠습니까라는 상당히 비용 절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파업도 똑같습니다. 파업도 보면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까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관제사 파업할 때 제가 미국에 그 당시 유학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 들었습니다. 관제사 파업을 해결한 후에 그 모든 여파가 학교까지 왔습니다. 학교 수영장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파업했을 때 관제사 파업과 똑같은 방법으로 총장이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사회에 파급되는 걸 보면서 이 비용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비용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연례행사입니다. 파업 해결한 것 같은데 같은 비용을 또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조정 시스템을 한번 합리성, 또는 경제성을 한번 성격 비교를 해 보셨는지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 사례가 방폐장입니다. 방폐장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봤지만 해결은 됐지만 어느 지역에 몇 천 억씩 떠면서 했다 하는데 거기에 그 돈이 들어가는 데에 대한 사업성과 경제성과 우선순위가 맞는지 그것을 감사원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 :** 정부 정책 조정 시스템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도 어떤 스님이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드러누워서 그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불행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를 해야 한다. 이것이 원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소위 배제와 균열의 논리, 이것이 집단 간에, 지역 간에, 세대 간에 균열과 배제의 갈등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타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

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우리가 민주주의로 가는 데에 있어서 중국에 떨어지는 점이 어떤 점이냐, 중국의 푸동을 작년에 또 한 번 가서 보고 왔지만 푸동의 도시 구역을 안내하는 사람한테 장난삼아 물었습니다. 푸동 지구를 만약에 리어렌지 한다면 쉽게 가능하다고 보느냐 했더니 간단하다고 하더군요 중국의 고속도로를 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네 한 가운데를 뚫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가 있다가 두 개로 갈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데 소위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고 들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과 환경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 보호론자들과 개발 주창자들 사이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배제와 균열의 논리가 팽팽히 맞서는데 보니까 집단 간에는 최적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모아놓고 보면 최악의 모순을 가져오는, 그래서 이른바 집단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이 한 두 개가 아닌데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 발전 과정에서 지난 4~50년 동안 압축 성장, 그리고 민주주의 역사, 대화와 토론이 없는 사회 흐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을 타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가끔 각 부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계 집단의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고 들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과학적으로 확실하면 그것은 뭔가 정책이라는 것은 그늘진 부분도 있고 햇빛이 나는 부분도 있고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빛이 많이 쏘이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타협하지 말고 밀어붙여라 라는 얘기를 가끔 합시다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파업 문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는 경제 부총리 할 때부터 이런 원칙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노조를 알려야 한다. 노조는 인사와 경영에 대해서는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파이는 공정하게 분배하는 이런 3대 원칙을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지켜나가면 언젠가는 올 것이 올 것이고 지금 사실 노조가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노조 가입률이 12%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그 정도를 가지고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할 때 한 가지 비사를 공개하면 그 당시 한 전노조 5,000~6,000명이 파업을 했습니다. 명동성당에 주모자들이 12명 모여서 핸드폰으로 파업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소위 출몰하는 주동자들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취한 조치가 원칙적 대응이었습니다. 노조 가입비 못 쓰게 하

고 노조 돈 못 쓰게 했습니다. 한전 사태이 있습니다만 사태에서 추방시키고, 두 번 최고를 해 가지고 안 되면 해임 시키고 그 대신에 5,000명에 해당하는 숫자를 어디에서 충당하느냐 하면 군에 공병대가 있습니다. 한전 연구소에 2주일씩 훈련 시키면 최대 140명을 훈련 시켜서 투입하고 그래서 앞으로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군대와 같은 잉여 인력을, 만약에 기관 산업에 대한 파업이 일어날 경우에 군의 인력을 동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국방부에 얘기를 해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만에 봉급 한 푼 안 올려주고 원칙적으로 처리했더니 그 당시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써 할 일 다 했으니까 놀아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좌우간 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해야지 이것이 뭔가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면 약효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폐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집단적으로 하는 게 좋은 것인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정이 없고, 이미 지역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종현 부즈앨런 앤드 해밀턴 코리아 사장** :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3년째를 넘어서 후반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는 정부로써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역할은 세계화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부의 유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클로즈 이코노미가 아니고 오픈 이코노미의 정부 정책이라는 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고 본다면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행하시는 고급 공무원들이 과거에 행정 중심이 아니고 정부 조직을 획기적으로 구조를 개혁해서 지금 하던 레귤레이션의 규제가 아니라 조직의 개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어드민 쪽인 조직과 전문가 조직을 구조적으로 나누어서 시장의 복잡성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원의 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어 보고 싶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R&D 국

책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R&D에 대한 투자는 민간 섹터도 그렇게 굉장히 유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매니지먼트 상에서 봤을 때 R&D 매니지먼트도 별도의 전문 분야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쪽 분야가 일천하다고 봅니다. 돈은 많이 퍼붓고 있는데 그 효과를 보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 :** 두 가지 다 옳으신 말씀이고 특히 세계화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세계화의 시도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 대전은 물리적인 영토 확장을 통해서 세계화가 소위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세계화가 시도 됐었습니다만 그것이 어정쩡한 상태로 끝난 상태에서 지금의 세계화의 추구는 사실 반대론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富)의 하향평준화, 또 다보스 포럼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얼굴 있는 세계화 등 반세계화의 논리와 저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무한 경쟁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정책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경제학회에 나가서 세계화에 관련된 경제 현상을 오늘날의 경제 언론은 다시 써야 한다고 경제학자들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내부를 겨냥한 경제 정책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라져야 되고 이것을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와야 하지 않느냐, 일례로 제가 비서실장 할 때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환경부 소관인데 명단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부 환경 학자예요 대통령 모시고 얘기하는 것 가만히 들어보니까 환경을 위해서는 개발이고 뭐고 도대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경제부총리 그만 두고 노르웨이에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87%가 산악지대입니다. 산꼭대기까지 집이 있는 데 안내하는 사람한테 저것이 환경 정책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했더니 노르웨이는 87% 산악이기 때문에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에 관련 경제학자들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탈바꿈 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이런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원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전략 감사 본부라는 걸 만들었고 특별 조사 본부라는 걸 만들었는데 전략 감사 본부에는 팀제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고유 기능이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팀제로 하고 있는 몇 개 부처가 있는데 그것은 형식만 과에서 팀으로 바꾸어 놓았을 뿐이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무슨 기능을 갖는다는 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번 발족한 두 개 본부는 고유기능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기동 타격대 비슷하게 움직이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현재 정부 조직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저희가 언젠가 한번 국영 기업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유 기능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니까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지금 시점에서 환골탈퇴 할 기능을 계속 가지고 그 게 파킨스 법칙인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성과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의 역할을 현재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기능을 계속 고집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우선 공기업인 경우에 금년에 확실하게 그 역사적 소명을 다 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능 조정을 감사원이 유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부에서 시빌리온이 국영 기업체 사장으로 간 곳도 있고, 그때 역사적 소명을 다 한 공기업은 이제 뭔가 대폭적인 구조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때 신문에 크게 받아서 지금 공기업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끝나면 지배 구조에서부터 역할을 다한 공기업의 역할이 그 공기업의 앞으로의 기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 지에 대해서도 제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 부문부터 그렇게 나가도록 하는 데에 감사원이 역할을 하고자 하고, R&D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렸지만 맞는 말씀이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우리가 열두 번째로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 길도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과제 선정에서부터 그 과제를 수행하는 그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 체계가 완전히 나누어 먹기 식으로 되어 있다, 팀장이 적당히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메카니즘을 뜯어 고쳐놓지 않으면 돈만 들어가고 이것에 대한 성과는 볼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미래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기획예산처 장관할 때부터 느낀 것입니다. 과기부가 과학기술 위원회의 사무 총장국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한다. 또 부총리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과학기술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해야겠다. 막연하게 생각해 본 건데 G7 리서치, G7 중요한 국가의 핵심 사업, 그 다음에 펀더멘탈, 기초에 관련된 것 이걸 국가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위 기업에서 발전시키는 산업 현장 기술, 이걸 기업이 스스로 해야지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는 산업현장기술까지 정부가 떠안고 가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원칙에 따라서 G7 기초 기술은 정부가 담당하고, 공공국이 담당하고 산업현장 기술은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해야 한다. 안 그러면 그 기업은 사라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개발을 유인하는 데에서 기업 경쟁력이 생겨야지 그것을 정부에 의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말씀하신 R&D매니지먼트 차원에서의 시스템 문제는 이번에 황우석 교수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큰 비중을 두고 앞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 :** 이 자리에 나오시면 곤혹스러운 질문 한두 가지씩 받으시는데 오늘은 다들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주필께서는 혈죽이 와전되어서 핏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핏대라는 말을 한자로 쓰다 보니까 혈죽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초 개혁 위원회에서 핏대 내시는 걸 제가 당했습니다. 그때 제 질문은 당시에 경제 부처에 장관을 하실 때 생각하시는 기업 활동 규제라든지 행정 규제를 포함한 정부 규제와 지금 감사원장 하시면서 정부 규제를 생각하시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정책 감사라고 하는데, 그 정책 감사라고 하면 감사의 대상이 정책을 시행하는 각 부처의 회계 감사 뿐만 아니라 정책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의 정책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정책 조정 기능을 하는 정책적 감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도 되고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적 감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학 감사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하고 사학의 감사도 그렇게 불필요하다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자체 감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감사, 즉 간접 감사를 통해서 사학까지 감사하는 건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한계 내에서 감사하는 것은 찬성하니까 이것과 관련지어서 정책감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 대체로 시스템 감사, 정책 감사 하면서 지나치게 감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은 됩니다.

**전윤철 감사원장** :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얘기한 것은 공정거래 위원회나 기획 예산처에서 하고 있는 규제도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지요? 그때 내 답변이 시카고 대학의 프리드만 교수가 현대 국가의 기능이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분배기능이 있고 하나는 규제 기능이 있고 감시 기능이 있고 국가의 기업자 기능이 있다. 프리드만(Milton Friedman) 교수는 국가의 기업자 기능과 규제 기능은 과감하게 없애고 분배 기능과 감시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50년대 초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 교수도 독일 경제의 시장 경제 원리 질서를 제시하면서, 규제가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인지 시장이 돌아가는 메카니즘의 원칙을 정하는 감시에 관련된 규제인지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기획 예산처 또는 여기에서 하려는 것은 소위 감시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번에 이영남 교수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소론에는 아직도 변화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뒤에 정책 감사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 건데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감사원이 하고 있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잘못되는 것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회계의 잘못된 것, 또 법적 근거 없이 지방 자치단체가 권위주의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금을 받는 것을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단체 수위 계약 제도가 중소기업체에서 혜택을 받는 곳이 250만~280만개의 중소기업 가운데 0.6% 정도에 불과 합니다. 이것이 마치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보호제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적 수위 계약 제도란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정부가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상품의 질적 수준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팔리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21세기에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없애라, 또 아까 얘기한대로 환경 평가, 영향 평가 등 네 개가 있는데 3년 7개월 걸리고 아까는 점잖게 얘기했지만 이게 위원들한테 많이 들어갑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중국에 가서 공장 설립허가 내려고 하면 내일 당장 허가 내 주고 내일 건설 해 주고 이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무슨 경영을 하느냐 이걸 통합해라. 또 400만 신용불량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신용 불량자 관리 실태를 조사하니까 신용 불량자로 판정이 났는데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

다. 이민 허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정보의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라 은행연합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은행 연합회 공유 시스템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신용 불량자 판결이 나면 은행들이 알 수 있게 만들에 놓았습니다. 그러한 정보가 외무부 이민국, 영사국까지 갑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관련에 제가 재경부 장관 할 때 보니까 세금 관련된 정부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고 지방세 내기 위한 부동산 정부를 행자부가 가지고 있고 또 건교부는 지적 관리하기 위한 정부 별도로 가지고 있고, 이걸 전부 통합 해서 기획 예산 부총리보다는 감사원장이 좀 파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 안 들으면 직무감찰 통해 가지고 징계가 가능하더라고요. 전화 한마디로 장관한테 고쳐라 하면 고쳐요. 그리고 내가 41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고 감사원장 하다 끝나면 장관 생활 12년 하는 사람인데 장관들이 전부 후배입니다. 고쳐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정책이 어떻고 저렇고 이런 소리 할 처지가 됩니까?

여기에 금융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시는 데 금융 감독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 볼까요? 금융감독원이 은행조직과 비은행 조직이 완전히 칸막이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국에서 뭘 하는지 비은행국은 모릅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말로는 유니버설 बैं킹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계속 떠들어대면서도 감독기구는 완전히 비대칭적입니다.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연 위원장님한테 그래 가지고 무슨 정보를 공유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감사원이 정책에 개입한다하고 금융감독원 친구도 고발까지 했는데 그래서 검찰총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것 당장 각하 시키라고 했습니다. 또한 KTX가 운영에 들어가서 지방 공항, 민항이 수요가 40~50% 줄고 있는데 그걸 미련하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부 정책이니까 그냥 두어야 됩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HRI**

---

정리 및 교열

주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 02-3669-4030

---

## HRI 經濟 指標

---

###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0	2001	2002	2003	2004(P)	2005(P)	2006(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8.5	3.8	7.0	3.1	4.6	4.0	4.5
	최종소비지출 (%)	7.1	4.9	7.6	-0.3	0.2	-	3.6
	민간소비 (%)	8.4	4.9	7.9	-1.2	-0.5	3.2	3.5
	총고정자본형성 (%)	12.2	-0.2	6.6	4.0	1.9	-	3.1
	건설투자 (%)	-0.7	6.0	5.3	7.9	1.1	0.3	1.5
	설비투자 (%)	33.6	-9.0	7.5	-1.2	3.8	5.1	5.5
대 외 거 래 준 거 기	경상수지 (억 \$)	122	80	54	119	282	166	80
	무역수지 (억 \$)	118	93	103	150	294	235	120
	수출 (억 \$)	1,723	1,504	1,625	1,938	2,538	2,847	3,120
	증가율 (%)	(19.9)	(-12.7)	(8.0)	(19.3)	(31.0)	(12.2)	(9.6)
	수입 (억 \$)	1,605	1,411	1,521	1,788	2,245	2,612	3,000
	증가율 (%)	(34.0)	(-12.1)	(7.8)	(17.6)	(25.5)	(16.3)	(14.8)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3	4.1	2.7	3.6	3.6	2.7	3.2
	실업률 (%)	4.1	3.8	3.1	3.4	3.7	3.7	3.5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131	1,291	1,253	1,192	1,145	1,024	980
	국고채금리 (평균, %)	8.3	5.7	5.8	4.6	4.1	4.3	4.6

주: 2005년 국민 계정은 한은 속보치 기준이며, 최종소비지출 및 총고정자본형성은 미발표됨.